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정부서 직접 선박 발주해야”

도, 긴급 대책회의 “전북 수출의 7.2% 차지 6천여 근로자 실직 위기 건조물량 확보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전북도의 대책마련이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2일 전북도와 군산시, 해상기자재연구원, JY중공업 관계자들이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방향 가다를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에 따른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힘이 실리고 있어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현대 중공업 군산 조선소 규모?

현대 중공업 군산조선소는 1조 2,000억원이 투자됐고 군산시 2국가 산업단지에서 위치해 있다. 총 54만8,000평 부지에 공장 5개동과 130만톤 규모의 도크 1개, 콜라이트 크레인 1,660톤 시설이 구축돼 있다.

사업은 선박, 해양 플랫폼, 엔진기계, 풍력 등을 주로 생산한다.

매출규모는 2012년 1조1,300억원, 2013년 8,600억원, 2014년 8,301억원, 2015년 1조1,418억원으로 나타났다.



1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관련 대책 긴급대책 회의에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도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이홍열 JY중공업 대표 및 국중화 우신산업 대표 등 참석자들이 대책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1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관련 대책 긴급대책 회의에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 도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이홍열 JY중공업 대표 및 국중화 우신산업 대표 등 참석자들이 대책 긴급대책 회의를 갖고 있다.

특히 고용인원만 82개사에 4,825명이 근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로 인건비 지급만 1,975억원, 군산기계지역가계소비 지출 약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조선소 중단은 왜?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26일 대형 3사 등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추진 계획 발표가 단초가 됐다. 무엇보다도 향후 3년간 수조 전반기 156억불에 불과, 과거 6년간 평균 85% 수준인 점이 영향을 끼쳤다.

또한 군산 조선소의 경우 내년 7월까지 건조물량이 있는 반면에 울산은 전혀 없어 군산에서 건조할 예정이었

던 LPG선 2척을 울산으로 넘긴게 위기를 초래했다.

이에 군산조선소는 지난 4월 5,250명에 이르던 지원을 5월 5,089명, 6월 4,825명으로 감축했고 소장직도 본사 전무에서 상무로 격하했다. 부서 역시 15개 부서에서 9개 부서로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지역경제 악화 우려

전북도는 생산유발효과만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번 중단이 막대한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군산 경제의 20%, 전북수출의 7.2%를 차지하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

단 파급력 때문에 전북도는 무거운 분위기다.

특히 내년부터 협력업체 일감은 없게 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 심각한 위기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군산도크가 폐쇄되면 6,000명의 근로자들이 대량 실직하게 되고 이와 연계해 2만여명의 생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대책은 없나?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는 정부가 직접 선박을 발주하는 계획 조성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정부가 직접 선박 발주에 나선다면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독일이 이미 시행했던 방

식이다.

또 컨테이너 선박 규제 강화로 선박 수리나 개조 필요성이 큰 만큼 군산 조선소를 이에 맞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것.

이번 정부 해당 부처를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현대 중공업 지휘부와 접촉해 물량배정을 이끌어 내야 하지만 설득이 요원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관계자는 “현대 중공업의 경우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지역경제만으로는 설득이 쉽지 않다”며 “건조물량 확보는 정치적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면 개각 없이는
민심이탈 못막는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에 경고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12일 정부 인사들의 최근 행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면 개각을 요구한다. 전면 개각 없이는 국민의 분노와 민심이탈을 막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에 박근혜 정부 하에 내각들이 너무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 부처 하나로 수습하기에는 늦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민심이 흉흉한데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당과 부처 공무원들이 연이어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망언 망동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민이 내각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바지 수선 외교부, 개폐지 망언 교육부, 브랜즈카피 문화부, 막무가내 보훈처, 심지어 성매매 일부 미래부 직원, 전혀 컨트론타워 역할을 못하는 경제부총리, 맞춤형보육 지방재정 개편을 밀어붙이는 행정자치부, 사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국방부 등 어느 부처 하나 잘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부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총선 민심을 반영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이 필요했음에도 야당은 그간 개각 이야기를 안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민심수습책을 내길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엉망진창 내각을 갖고 도저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고 개각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주 기자

- ▶ 매일 INDEX
- 2면 미국 탄소기업, 김제서 동지 틀다
- 6면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부실 우려

사드, 경북 성주에 배치 가능성 크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수도권이 아닌 후방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특히 경북 성주나 경남 양산 등 영남권 배치가 유력한 분위기다. 이중 성주가 양산에 비해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모 언론사와 통화에서 “사드 배치 지역으로 수도권이 아닌 후방 지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도권에 배

치될 경우 북한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 역시 “아직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수도권은 휴전선에서 가깝지 않느냐”며 수도권 배치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군 안팎에선 경북 성주군과 경남 양산시로 좁혀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성주는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고, 평택·오산 미군기지가

지 거리가 사드 요격미사일의 사정거리인 200km 이내여서 주한미군의 주요 시설을 보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어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어 부지 선정 절차도 용이한 편이다.

일각에서는 경북 성주를 성산리 일대가 배치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됐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이에 대해 “배치 부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설명할 것”이라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또 하나의 후보지로 꼽히는 양산은 과거 우리 군의 방공기지가 있었던 곳으로 현재 비어 있는 상태다. 기지 조성이 수월한 편이고 주변에 민가가 많지 않다고 한다. 과거 우리 공군이 레이더 기지로 활용했던 전례도 있다. 사드 레이더 탐지거리(600~800km) 등을 이유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 측을 고려하면 양산 배치 가능성이 높다는 의

견도 많다.

이로 인해 양산에 사드 레이더를 성주에 사드 포대를 각각 분리해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는 사격통제대와 레이더, 발사대, 이렇게 패키지로 운용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다 운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사한 지역에 (배치돼야) 성능 발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안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용주 기자

인구 밀집지역 아니어서 레이더 전자파 논란에 '자유' 부지 선정 절차 용이... 국방부 "조속한 시일 내 설명할 것"

청결·세상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 26℃로 절약은 더하기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서지역을 신재생 에너지로 희망은 두배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기쁨은 나누기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